

81호, 2009.1]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전국 각지의 동지들이 모이니 참 좋습니다" - 2009년 정세와 활동
방향 논의한 임원워크숍 / 박석분

현안 / 대량살상무기(WMD) 대확산 실무기구' / 오혜란

현장 /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역의 현실 고발 / 현호현

기획 / 방위비 분담금 8차 특별 협정 협상 경과와 평통사의 대응 / 정리 : 오미정

자료 / 방위비 분담 청문회 청원서

| 여는 그림 |

민주주의가 숨이 막히고 있다

2008년 12월 31일의 국회 앞.
국회안에서 본회의장을 두고
여야간에 '사생결단'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국회밖에서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사생결단'의 투쟁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을
언론개악법을 막기 위해서다.

파시즘적인 MB 악법을 막기위한
촛불들의 움직임도 술렁거리는 2009년 1월이다.

사진 이유빈·글 오미정

|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전국 각지의 동지들이 모이니 참 좋습니다.”
평통사 임원워크숍 - 2009년 정세와 활동방향

회원팀장 박석분

2008년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 새로운 각오로 활동을 결의하는 총회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평통사 대표와 운영위원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매 년 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임원 워크숍이 올해에는 대전역 앞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1월 1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신규 조직을 준비하는 회원들이 많이 참가하여 그 어느 워크숍보다 더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날 워크숍은 오전 11시 총회준비위원회에 이어 열린 중앙운영위원회를 마친 후에 연속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신 56명의 회원들은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문규현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올해가 분단의 장벽을 넘은지 20년이 되는 해”라고 소회를 밝히고 “2008년 다하지 못한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2009년에 계속 이어 남북이 하나되는 해로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배종렬 상임대표는 “오늘 새로운 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 가슴이 뜨거워진다”며 평화협정 실현운동으로 약진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지역별로 참가자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통사 결성을 준비 중인 지역, 임원이 바뀐 지역 등 예년에 비해 처음 뵙는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유영재 정책실장이 2009년 정세를 중심으로 평통사의 활동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1시간 20분간 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정구 공동대표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유 실장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스마트 파워’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공약으로 내건 오바마 정부는 북에 대해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 실장은 오바마 정부가 2012년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수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북도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낼 뿐 아니라 북미관계 진전에도 걸림돌을 놓는 한편, 한미관계의 침략적 성격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모든 부담과 책임을 민중들에게 전가하고 민주적인 권리를 짓밟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대중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정세를 맞는 진보진영의 준비상태는 취약해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면서 평통사가 정세와 대중의 본질적 요구인 한반도 평화협정운동과 반이명박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관해서는 강정구, ‘오바마 당선과 한반도 정세’, 회지 80호(2008년 11·12월호)를 참고하세요)

참가자들은 발제 내용 중 미국의 패권이 상실되어 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유영재 실장은 미국 패권의 몰락이 한반도에 미치는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 “미국은 점차 자력으로 해외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그 부담을 동맹국에 떠넘기려 할 것이다. 돈 뿐 아니라, 군사력과 외교적인 부담까지를 의미한다. 곧, 동맹수탈구조다. 방위비분담금 투쟁이나 미군쓰레기탄약(WRSA) 투쟁은 미국의 의도를 저지하는 투쟁이다. 우리가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펼쳐 미군을 내보내는 것은 미국의 패권 상실과정을 가속화하는 매우 현실성 있는 투쟁이며, 우리가 어느만큼 실천을 벌이느냐에 따라 미국 패권의 상실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발제를 마친 후 전개된 토론시간에 장창원 경기남부평통사 대표는 “정세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지역에서는 움츠려든 기세가 잘 퍼지지 않아 동력을 찾기가 어렵다.”고 토로하였고, 이천재 고문은 “평통사가 앞장서서 진보진영의 단결을 이루어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김병균 광주전남 평통사 상임대표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이 진보운동을 살리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평통사는 작년에도 봤듯이 잘됐다. 광주전남 지역만 해도 그렇다. 전체 운동이 다 같이 살려면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다 같이 펼치면 된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원식 회원은 “무건리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석률 운영위원은 ‘대북 적대시정책 폐기’가 향후 수년간의 투쟁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고, 지역별로 사업제안을 해보자는 김판태 군산 평통사 사무국장의 제안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정구 대표는 임원워크숍 전에 지역별로 사업 제안을 제출하면 훨씬 내용이 풍부해질 것 같다면서 이에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내놓으셨습니다.

강정구 대표는 이 날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이 실천적 내용뿐 아니라 정신적 자양분을 주는 것 같다. 평통사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결의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워크숍을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모두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와 뒤풀이를 하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추웠지만 모두 밝고 기쁜 얼굴로 내일을 향해 더 열심히 뛰는 각오를 나누었습니다.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들, 서로 의지가 되는 사람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발제문과 토론과제를 미리 제시하는 등 사전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참가하신 임원들의 의지와 열의를 다 채우지 못한 아쉬움이 컸던 임원워크숍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오신 임원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분히 지역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짙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당한 고 도예중 선생 부인이신 신동숙 여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고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는 평통사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짙 전날 내린 눈 때문에 오는 길이 고생스러웠을 광전지역 임원들. 나주, 목포, 무안, 광주, 해남, 곡성에서들 오셨습니다. 서창호 공동대표는 평통사와 자주민주통일 운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한해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짬 지난 해 12월에 총회를 열어 5년 만에 임원을 새롭게 선출한 안동평통사, 박용제 대표는 정말 많이들 어려운 때지만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김창환 전 대표는 늦게 오셨는데, 중앙의 공동대표로 모실 예정입니다.

짬 부산평통사 준비모임의 이왈신 선생님. 이 자리에 함께 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산지역이 미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다면서도 부산지역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짬 서울평통사와 중앙 임원분들 소개가 있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해방 전후 시기에 대해 즐겁고 열띤 토론을 하었다고요. 늦게 임종철 공동대표와 박석률 운영위원도 오셨습니다.

짬 인천평통사 임원들, 염성태 공동대표는 2008년에는 지방에 있어서 평통사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며 죄송스러워 하였고, 김원식 회원은 지난해 왕성한 활동으로 운영위원으로 '등업' 되었다고 합니다.

? 전주평통사 준비모임의 문규현 상임대표, 이석영 교수, 노백송 회원. 이석영 교수께서는 얼마전 강정구 공동대표의 강의를 듣고 미군이 점령군인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미군 몰아내는 투쟁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평통사 일을 같이하자고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였습니다.

? 김제부안 준비모임의 손은하 목사님은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새만금으로 문규현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고, 김제부안 평통사도 하게 되었다며 오늘 못오신 엄영애 대표를 도와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전북평통사의 전병생 공동대표와 김대송 회원, 어려운 조직상황을 다시 추스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 군산평통사의 유승기 대표와 문성주 운영위원. 유승기 대표는 “군산은 작년에 창립을 했고, 회원 구성원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다. 나름 열심히 했고, 성과도 많았는데, 오늘 다른 지역 활동들을 보니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경기남부 이종필 공동대표와 현호현 사무국장. 장창원 공동대표도 늦게 참석하였습니다. 이종필 대표는 평택 반미월례집회를 하면서 평택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 6회차인데, 30회가 되기 전에 미군을 내보내겠다는 결의를 해 주었습니다.

? 부천평통사 주정숙 공동대표와 김현숙 사무국장. 총회 준비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지 못해서 죄송스럽다고요.

| 평화협정 실현운동 |

2008년도 추진위원·길잡이 조직 현황

<표1> 2008년도 조직주체별 추진위원, 길잡이 조직 통계(단위:명)

지역	중양	서울	부천	인천	경기남부	대전충남	군산				
전북	전주	광주전남	안동	대구	계						
7/27까지		361	546	181	504	80	214	112	6	0	
40	358	68	24	2,548							
12/31까지		179	267	119	188	16	52	23	0		
0	259	8	0	1,111							
계	540	813	300	692	96	266	135	60	4	0	
617	76	24	3,659								
7/27까지		194	2,033	294	3,163	27	434	131	1	7	4
167	1,657	299	1,204	9,777							
12/31까지		549	526	32	414	19	9	237	3	7	6
6	92	11	23	2,294							
계	743	2,559	326	3,577	46	443	368	550	1	7	3
1,749	310	1,227	12,071								

※ 중양 통계에는 제주, 강원, 해외 추진위원도 포함되어 있음.

<표2> 2008년도 조직주체별 광역시/도 추진위원 통계(단위:명)

광역시·도	중양	서울	부천	인천	경기남부	대전충남
군산	전북	전주	광주전남	안동	대구	계
서울	209	541	68	84	3	5
16			926			
인천	3	12	19	460	3	
16			513			
대전	1			3	131	1
			136			
광주	8	3		6		1
143			161			
대구	8			2		
2		23	35			
울산		1	1	4		
1			7			
부산	23	3			1	

15			42										
경기	55	148	183	79	87	3	3						
20			578										
강원	7	5	2	6		2							
1			23										
충남	1	8	1	6		97	1						
2			116										
충북	3	1		5		10							
2			21										
전남	13	8		8									
364			393										
전북	13	12		8		1	124	60	4	0			
7			265										
경남	15	2	1	4		1	1						
4			28										
경북	7	2		4	2								
1	54		70										
제주	1	7	1	3									
2			14										
국내 계	367	753	276	682	90	251	136	60	4	0			
596	54	23	3,328										
해외	24	5	3										
1			33										
국내외 계		391	758	279	682	90	251	136	6	0			
40	597	54	23	3,361									

※ 이 표는 12월 10일 현재 통계를 취합한 것임.

※ 해외 추진위원은 미국 22명, 캐나다 3명, 프랑스 3명, 아시아 등 기타 5명.

<표3> 2008년도 조직주체별 광역시/도 추진위원 통계(단위:명)

부문	중앙	서울	부천	인천	경기남부	대전충남	군 산		
전북	전주	광주전남	안동	대구	해외	계			
/조직주체									
노동	84	86	125	123	55	20	55	3	6 6
113	24			754					
농민	3	1	7	5	4	17	8		
92	4			141					
빈민(주민)				9	4			12	
					25				
학생	2	6	5	24	1	2	1		
23	3			67					

종교	86	172	16	140	3	27	15	3		
136		5		603						
정치/정당		9	55	12	63	7	12	6	2	
1	17	1		1	186					
통일	31	16		9			10		1	
		6		73						
평화	8	190	48	122	9	28	6	18		
40	5	2		476						
교육	1	15	2	9	1	5	1		2	1
				55						
사회단체		2	15	3	3	1	10	2		
	41				77					
학술	39	11			4		4	3		
5			1	67						
법조(변호사)			7	2		1				
					10					
언론	15	10	1	4		4	1			
4	1			40						
출판			2	1			2			
				5						
예술	16	7	4	21	1	3			4	
2				58						
보건의료		19			2	1	5	2		
4	5				38					
사업/자영업	1	14	13			2	2	7		
2	1	5			47					
시민	11		13	41	6	18	12	3		
43	3			150						
여성		2	8	11		4	1			
				26						
인권	17	2	3	4		5				
1				32						
개별인사		17	168		5		77	3	3	1
	80	1		8	390					
기타	35	14	44	87	2	1				
2	2	10		197						
계	403	786	315	683	93	254	137	60	7	8
621	54	23	10	3,507						

※ 이 표는 12월 10일 현재 통계를 취합한 것임.

2008년 한 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실현운동’을 통해 전국 곳곳에 추진위원 3,659명, 길잡이 12,071명이 모집되었습니다. 2009년에도 추진위원, 길잡이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협정실현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대량살상무기(WMD) 대확산 실무기구’

자주평화팀장 오혜란

한미 군사당국이 북의 WMD 제거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 ‘대확산 실무기구(Counter-Proliferation Working Group)’를 구성, 운용 중에 있다는 사실이 지난 12월 29일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 부설 WMD 연구 센터가 최근 공개한 ‘WMD 근절을 위한 국제파트너십(International Partnerships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보고서에 따르면,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한미 공동으로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또 미 태평양사령부가 일본 방위청과는 화학, 생물, 방사능 및 핵(CBRN) 방어 실무기구를 설치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33개 국가들과 다자간 기획 및 능력 향상팀(MPAT) 훈련을 시행 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작년 연말 MB 악법 저지를 위한 민주당 농성 등 국내정치 이슈에 밀려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미국의 전 방위적인 대북 봉쇄

미국은 북과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의 핵 개발과 비국가 행위자(테러 단체 등)의 핵무기 또는 핵물질 취득을 중대한 안보상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핵확산의 물결이라는 실질적인 위협(A real danger of a cascade of nuclear proliferation)에 직면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방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린은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이와 관련된 기술·물질·시스템의 확산은 미국은 물론 아시아, 전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력한 동맹, 지역국가들과의 파트너십, 미군의 전진배치가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WMD 근절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보고서 역시 WMD 근절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목적 하에 2007년 5월 16일~17일에 있었던 미 국방대 WMD 연구센터 주최의 비공개 토론회에 기초해 작성되었는데, 슈트어트 리비와 존 루드가 토론회의 기조강연을 맡았다고 한다. 슈트어트 리비는 미 재무부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 거래 방지를 위해 2006년에 신설한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부차관보다. 북한과 불법자금을 거래했다는 구실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조치를 주도해온 장본인이 바로 리비다. 존 루드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직무대행) 역시 대북 PSI와 관련이 깊은 인사다. 미국은 2008년 5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창설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는데,

이때 루드는 이란과 함께 북한을 WMD를 확산할 우려가 있는 주요국가로 지목하며 한국정부에 PSI 정식 참가를 요구한 바 있다.

한미 WMD 실무기구와 일미 CBRN 실무기구가 양자 동맹차원의 대응이라면, PSI와 북한 유사시와 같은 비상사태 시 신속한 다국적 사령부 구성 및 표준 작전절차 개발을 목표로 한 MPAT 훈련은 WMD 대확산과 관련된 국제적 협력의 일환이다. MPAT 훈련은 2002년 1월에 미국의 제안으로 북한에 대량난민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한반도 긴급 사태시 다국적군의 지원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워크숍 및 컴퓨터 도상 모의훈련이 서울에서 실시되었다. 이 사실은 WMD 제거를 구실로 한 미국의 대북 봉쇄망이 전 방위적, 입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대북 선제공격 능력 배양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핑계로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미 태평양사령부와 한국 합참사이에 대북 선제공격 능력 개발을 위해 실무기구가 구성되어, 운용 중에 있다는 사실이 밖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확산 실무기구’가 언제부터 구성됐는지는 모르지만 ‘WMD 근절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보고서’가 2007년 5월 비공개 전문가 토론회에 기초해 작성됐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한미당국은 최소한 2007년 5월 전후, 대북 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 5029의 발전과 함께 ‘대확산 실무기구’를 운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대확산 실무기구’의 구성과 운용은 6자회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 핵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육해공 수송로 봉쇄, 핵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파괴, WMD 관련 설비와 인원을 장악하기 위한 특수부대 투입 등의 군사적 옵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또 이는 WMD 제거를 핑계로 한 대북 선제공격적 군사작전이 실행 단계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대확산’(Counter Proliferation)은 비확산(Non Proliferation)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핵확산에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국방부는 ‘대확산’을 ‘적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일 때 군사적 정밀타격(Counterforce)을 포함하여 적극적, 공세적으로 WMD 위협에 대처하는 개념’(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문답백과, 2004년)이라고 밝히고 있다. WMD를 사용할 징후가 보일 때 정밀타격 한다는 것은 선제공격을 의미한다. 미국도 ‘WMD 제거’는 ‘WMD 관련 프로그램이나 시설물의 위치 파악, 특성 규명, 대상물 장악, 불능화, 그리고 파괴를 뜻한다’(WMD 근절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보고서)라고 못 박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확산 실무기구’의 핵심적 목표는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의 발전과 이를 위한 군사력 배양으로 볼 수 있다. WMD 대확산을 명분으로 한미연합군이 대북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북봉쇄를 감행하는 것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다.

대확산 실무기구의 구체적 임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북(핵) 공격계획 및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미국이 9.11이후 WMD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한 대확산은 WMD 확산위험에 대해 선제공격을 허용하고 있다. 2001년 12월 31일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의회에 제출한 부시 정권은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북을 비롯하여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5개의 이른바 불량국가를 핵 선제공격 대상 국가로 지목하였다. 특히 부시 정권은 2003년 북한과 이란을 대상으로 개념계획 8022라는 핵 선제공격 계획서를 작성한 바 있다. 2007년 6월, 공식적으로 폐기됐다고 알려진 개념계획 8022와 달리 북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을 대상으로 한 WMD 대확산에 관한 개념계획인 8099는 계속 발전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WMD 대확산 계획 수립과 함께 한국정부에도 WMD 제거를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을 요구했는데 작전계획 5026, 5029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 내 핵, 생화학 무기 시설과 지휘/통제 시설 등 700여개에 달하는 표적을 편 포인트 공격으로 폭격한다는 내용의 작전계획 5026은 2003년 7월에 완성되었지만 작전계획 5029는 한국정부의 반대로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2008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9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의 내부 소요나 심지어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에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매우 도발적인 작전계획이다. 그런데 작전계획 5029의 핵심작전목표는 북한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 핵물질 등을 남한이 아닌 미국 주도로 접수, 장악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WMD 대확산 작전을 주도하는 미 전략사령부가 한미연합연습 울지프리덤가디언(UFG) 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 편성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국익과 국방목표에 역행

‘대확산 실무기구’와 작전계획 5029는 WMD에 대한 미국의 국익을 반영할 뿐, 민족화해와 번영,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 국익에는 철저히 역행한다. 미국이 북한 유사시 한미연합전력을 동원해 북의 육해공 수송로 봉쇄, 핵무기 관련 시설 파괴, WMD 관련 시설과 인원의 장악을 노리는 것은 미국의 핵 패권을 위협할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

또 미국 주도의 대북 WMD 작전은 주한미군사령관(유엔사령관)에 의한 WMD 작전통제, WMD 위기관리 권한의 허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꺾이기 환수에 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처럼 북의 WMD 제거를 핑계로 한 작전계획 5029는 미국 주도의 ‘대북 선제공격론’과 ‘북한 점령통치론’을 담고 있는 위험한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 국익에는 철저히 역행한다. 또 ‘대확산 실무기구’는 국방부 스스로가 정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목표에도 위배 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북 적대정책 폐기해야

오바마 정권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제1의 안보목표로 내세웠다. 테러리즘과 핵확산을 가장 중대한 안보위협이라고 보고 러시아와 핵 감축협상을 벌이는 한편, 북과 이란 등을 겨냥한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강화, 핵연료은행 창설 등 핵(무기)비확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는 미국이 점한 핵 우위를 전제로, 자국의 핵 패권을 위협할 어떤 확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 측면에서는 공화당 정권의 대확산 정책과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와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공략 방법으로 '단호하고 직접적 대화'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시대 북미 양자 대화, 한반도 평화포럼, 6자 회담의 전망은 한층 밝아 보인다.

미국은 지난 60년간 대북 적대정책을 펼침으로써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원인을 제공 하였다. 실패로 끝난 부시 정권의 대북 정책에서 미국의 새 정부가 얻어야 할 교훈은 대북 적대정책을 완전히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 폐기를 원한다면 대북 적대정책 폐기 및 불가침에 대한 북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또 9.19 공동성명에서 북핵 폐기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의 철회와 함께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역시 폐기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과 그 이행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북의 대량 살상무기 제거를 핑계로 한 북침계획을 모의하는 한미 '대확산 실무기구'를 해체하고 작전 계획 5029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W

| 현장 |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역의 현실 고발 경기남부평통사 현호현

2003년 한미 양국정부는 서울 용산미군기지과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 춘천의 캠프 페이지 등을 평택으로 집결하면서 기존의 467만평의 평택기지에 349만평을 추가로 확장하고 평택시 고덕면을 강제수용하여 주한미군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거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고덕지역 국제화 신도시라고 치장된 이 계획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539만평의 땅이 수용되어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옥토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국제투기자본을 유치하여 주한미군 가족들이 자유로이 뛰어놀수 있는 신도시를 만드는 계획때문에 말입니다. 치안 담당 주체가 미군헌병이나, 대한민국 경찰이나라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평택사람들이 오산공군기지가 오산에 있다면 국민들의 오산할 수 있으니 오산기지사 부르지 말라고 하지만 한겨레조차도 여태까지 오산공군기지사라고 부르는 송탄미공군기지는 64만평을, 대추리 옆의 K-6 안정리 기지는 285만평을 강제 수용한다고 하여 서탄주민들과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2008년까지 기지공사를 끝내고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고향 땅을 지키는 주민들의 소박하고 당연한 요구를 거짓말과 탄압으로 짓밟았으며 대추리 주민들은 2007년 4월까지 투쟁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김문수 경기지사와 송명호 평택시장, 평택시의회는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평택지역 주민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제 2의 대추리 사태가 우려되니 미군기지 공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간청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난리가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팽성의 대추리 주민들은 일제시대 때 1937년과 한국전쟁 때인 1951년 등 두 번이나 기지 건설때문에 내쫓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2007년 4월 친미사대적인 정부와 경찰의 탄압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수억 원의 추가 보상을 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으나, 주민들은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분양되는 이주단지 는 평당 가격이 평균 40만원이며 땅을 분양 받아 집을 지으려면 최소 2억원에서 3억원가량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 44가구 중 17가구만 주택청약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가구 중 7가구는 5,000만원 미만의 보상을 받고 대추리에서 쫓겨난 상태라 이주단지 입주 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한편, 고덕면의 경우 정부는 주한미군 배후도시, 영어공용의 국제자본유치의 장으로 만든다

며 주민 반대를 억압하였으며 주민 중 30% 이상이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분양받았으나 이주 보상시기가 연기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택시 세교지구와 안중읍 금곡리 주민들이 철도공사에 반대하는 현수막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미 2004년 3월 8일, 평택에서 주한미군 해병대 사전배치훈련과 ‘프리덤 배너 04’라는 군수물자 하역 훈련이 실시된 사실과 안정리 미군기지를 경유하는 것을 보면 이 철도가 주한미군 군수물자 수송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철도를 이용하여 경기도 파주의 무건리 훈련장과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으로 이동 훈련하며 한반도 전쟁시에는 전쟁물자를 수송하려는 것입니다. 평택이 평화도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도시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완공되거나 공사중인 도로들도 안정리 미군기지와 연결되고 있으며 미군들이 사용중입니다.

평택의 농민들은 땅을 빼앗겨 서산과 당진으로 농사를 지으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파업권 등 노동 3권이 무력화된 착취의 천국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평택미군기지만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저항할 것이라는 잠재적 가능성 때문에 노동기본권까지 제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정장선 국회의원 등은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쟁광 부시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만 굽실굽실 거리며 자국의 국민들의 재산과 안녕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미국의 정책에 충실하고 주민 저항을 공권력으로 억압한 자들입니다.

온갖 야산들을 파헤치며 대추리 주민들이 농사짓던 논에 쏟아 부어대는 주한미군과 한국정부의 전쟁기지 건설에 끝까지 투쟁합시다.

평택 경제위기의 주범은 미군기지 확장과 쌍용자동차를
말아먹고 튀어버린 악덕 먹튀 자본 ‘상하이자동차’다

미군기지 확장비 16조 5천억 원이면 쌍용자동차만한 회사 30개를 살릴 수 있다

최근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 신청 이후 평택 경제 전체의 파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언론은 미군기지 확장 공사 지연, 고덕 국제평화신도시 보상 지연,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등이 맞물려서, 평택 경제 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투기꾼들과 못된 건설업자들이 퍼뜨리는 왜곡선전일 뿐이다. 지난 60년 넘게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해 있던 동두천과 의정부, 군산과 송탄과 안정리에 무슨 경제가 발전했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사 기지는 지역경제의 암적 존재일 뿐이다. 미군기지가 없어지는 지역들에서, 공원, 대학교, 공단, 병원 등 어떤 것을 짓는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 머리를 모으고 있는 것을 보라!

정부는 미군기지를 확장한답시고 16조 5천억 원(그 중 15조5천억 원은 우리 국민 세금 부

담)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미국에 퍼주기”하고 있다. 주한미군 전용 군사 철도 건설, 주한미군 배후 전용 고덕 신도시 건설 같은 데 쓰는 돈은 서민 행복과는 전혀 관계없이 낭비하는 돈이다. 고속도로 건설 같은 것을 노리고 외지에서 몰려온 땅 투기꾼들에게나 이익이 되는 돈이다.

정부는 쌍용자동차 살리기에 그 돈을 써야 한다. 상하이 자본이 겨우 5천억 원 남짓 갖고 쌍용차를 인수했으니, 기지 확장만 중단해도 쌍용차만한 기업 30개를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정부는 대추리 주민들을 위해 그 돈을 써야 한다. 대추리 주민들은 지금도 국방부에 기지공사를 중단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2008년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안보에 난리가 날 것처럼 떠들던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지금 미군기지 이전을 2012년에서 2016년까지로 늦추고 있는데, 농민들은 그 때까지라도 거기 들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 한 푼도 안 들이고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이다.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경제가 사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회생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직장을 잃지 않아야 경제가 산다

경기도와 평택시, 일부 언론들이 주장하는 쌍용자동차 회생 방안에도 큰 문제가 있다. 저들의 눈에 온갖 차별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없다. 저들의 눈에 비친 비정규직은 그저 노동력 착취와 억압의 대상일 뿐이다. 저들은 쌍용의 신기술을 백주대낮에 노골적으로 훔쳐간 극악무도한 산업스파이 먹튀 ‘상하이’ 자본을 욱하지 않는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나쁜 투기자본한테라도, 어떻게든 빨리 팔아먹고 싶어 한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를 또 다시 외국의 투기 자본에 팔아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 쌍용자동차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인 데다가, 원하청과 납품 업체 직원, 그 가족 등 직접 당사자들만 해도 몇 만 명에 이르는 대기업이다. 따라서 국가가 인수해서 국영기업으로 만들거나, 경기도나 평택시가 인수해서 지방공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저 열심히 일한 죄밖에는 아무 죄가 없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지 말아야 한다. 원하청과 납품업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식당과 미용실과 구멍가게를 맘 편하게 들락날락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들의 일부라도 실업자로 만드는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이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실업자 소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 악랄하던 미국도 바뀌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산다!

미국은 건국부터 지금까지 전쟁과 약탈로 부자가 된 나라다. 최근에는 자국 국민들의 복지와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거짓 선전으로 이라크를 침략한 전범국이기도 하다. 또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고, 파생 상품 같은 종이쪼가리들을 팔아먹다 자멸의 자충수를 둔 문자 그대로 ‘돈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 미국의 최첨단 금융기법이라는 것이 지금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게 현재 경제대공황의 핵심이다.

그러던 미국인들이 “변화”를 최대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버락 오바마를 새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의 패권이 정말 끝날 것인지, 그렇다면 언제 패망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모두 인정

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당장 끝나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에 의해 학살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미군에게 학살당하고 있는 이라크 사람들만이 아니라, 평화를 애호하는 온 세계인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미국만, 그것도 전쟁광 부시의 정책만 따라다니던 애완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미군기지를 확장하는 짓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마저 부정하는 경제자유구역도 중단해야 한다. 미군기지를 성토한답시고 수많은 야산들을 파괴하는 것도 중단해야 하고, 고덕 주민들을 내쫓고 539만 평의 땅을 강탈해 주한미군 배후 도시를 만들려는 계획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명퇴니 희망퇴직이니 하면서 노동자를 직장에서 내쫓으면서 위로금 몇 푼 얹어준다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다. 농민들 강제로 내쫓고 땅값, 집값을 빨리 보상해 준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니, 주가지수니, 환율이니 하는 것들은 국민의 복지와 건강과 행복을 결코 대변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간곡히 호소한다.

“이제 바뀌자!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말고, 모든 시민이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2009년 1월 15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진보신당 평택안성추진위원회, 민주노총경기도본부, 615경기본부, 615 수원본부, 615 안산본부, 615 안양본부, 615 고양본부,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평택노동자의힘, 노동해방실천연대평택아산지부, 평택홍사단, 민예총평택지부(준), 평택평화센터, 경기남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택실업극복센터

| 기획 |

방위비분담금

8차 특별 협정 협상 경과와 평통사의 대응

- 2007년 3월 2일 방위비분담금 7차 특별협정 국회비준 동의를 위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김원웅) 부대의견

쥬정부는 매년 협상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시정할 것.

쥬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 방위비분담 7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 (부대의견 포함, 245명 중 찬성 192명, 반대 28명, 기권 25명)

● 2007년 4월 20일, 평통사,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축적과 관련 김장수 국방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

● 2007년 4월 25일, 평통사, 주한미군사령관 등을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 축적에 따른 이자수익 1천억원에 대한 소득세 120억원 포탈 추정, 관련자 처벌 요구.

● 2007년 4월 26일, 평통사, 방위비 분담금 낭비실태를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

● 2007년 6월 5일, 평통사,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 산정 및 운용방식 협상 (일명 제도개선 협상) 중단 촉구. 제도개선 미명으로 분담금 증액과 방위비분담금의 전용을 합법화해 줄 것을 우려함.

● 2007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비분담금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 통지.

● 2007년 10월 24일, 평통사, 방위비분담 제도변경 2차 협의 규탄 기자회견

2008년 1월 22일, 평통사,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 추징을 요구하는 국세청 앞 기자회견 열어.

- 2008년 3월 18일, 벨 주한미군사령관, 미 하원 세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1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고 보고. 또 주한 미2사단 이전과 관련해서도 “재원 마련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며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에서 나오도록 대체로 협의해왔다”면서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고 발언.

평통사, 미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

- 2008년 5월 14일, 외교통상부, 방위비분담금을 현물위주로 제공할 것이라고 협상 방침 발표.

평통사는 ‘현물 전환을 하게 되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통상부 협

상 방침 규탄 기자회견 열어.

- 2008년 7월 21일, 워싱턴에서 1차 협상. 방위비분담금 제공을 현물위주로 전환하는 방향 논의.(한국 협상대표 : 조병제 한미방위비분담협상정부대표(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국방부 관계관 || 미국 협상대표 : 잭슨 맥도널드(Jackson McDonald) 방위비분담협상대사(국무부),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등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평통사, 규탄 1인 시위

2008년 8월 4일, 민변 주최의 <21세기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토론회>에서 평통사는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대가로 한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기지이전 비용, 미국산 무기도입 비용, 방위비 분담금, 한국군 해외파병 비용, 한미연합연습 비용 등 천문학적 액수에 이른다고 지적. 또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군 측 요구가 전략동맹 합의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미군기지 반환 공여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 2008년 8월 28일, 서울에서 2차 협상. 평통사, 민주노총,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다함께, 무건리 주민대책위, 민주노동당 자통위, 서총련,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실천연대 공동 주최로 협상이 열리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공동집회 열어.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 이전비용을 한국이 대신 떠맡는 것이므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과 관련 협정 폐기 촉구.

- 2008년 9월 24일, 워싱턴에서 3차 협상. 외교통상부, '8천억원(방위비분담금)이 한미연합 전력 강화를 위해 각출한 자금'이라며 비판 여론 호도.

평통사,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각각 내놓다"는 의미인데, 8천억원은 전부 우리국민의 세금인 방위비분담금 아니냐"며 정부 주장 반박. 오히려 미국입장에서 궤변을 펼치며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주려는 외교통상부 협상 태도 규탄.

- 2008년 10월 8일, 이상희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2000년도부터 이미 한미 양국 정부가 양해했던 사항으로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주장. 이 장관은 또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자금을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사용한다고 해서 SMA나 LPP 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100% 공감한다"고 망언.

2008년 10월 10일 평통사,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민주노동 통일위원회와 함께 '이상희 장관의 발언은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을 합법이라 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의 '양해'를 근거로 헌법과 법률, 한미당국간의 협정과 국회결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상희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

- 2008년 10월 22일, 철저한 국정감사 요구하며 국회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

- 2008년 10월 29일, 서울에서 4차 협상. 평통사, 협상도 끝나기 전에 국회 예산안에 포함된 2009년도 방위비분담금 7,600억원 전액 삭감 요구하며 외교통상부 앞에서 항의집회. 평통사 의견서 외교통상부에 전달. 2002년부터 불법으로 축적한 1조1,193억원 전액 환수 요구.

2008년 11월 19일, 호놀룰루에서 5차 협상. 18일 평통사, 국방부 관계자 만나서 평통사 의견서 전달하고, 외교통상부 앞에서 규탄 1인 시위. 국방부 관계자는 "평통사의 주장을 참고하고 있고 협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협상의 자세한 상황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

2008년 11월 19일, 각계인사 125인,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불법전용 중단 을 촉구합니다.” 선언. 평통사, 미군기지 이전 직간접비용의 94.2%인 15조6,928억원이 한 국부담으로 될 판이라며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전용 중단 요구.

- 2008년 11월 24일, 5차 협상 결과 ‘한국 쪽 분담 몫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기로 하고 협정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하고, 분담금 제공방식을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 비분담금을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고 보도됨.

평통사는 이번 협상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 2008년 11월 24일, 7차협정 비준동의시의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한 것을 요구하는 ‘시 정요구’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2008년 12월 1일, 국세청에서 평통사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탈세 신고에 대해 “추징 세액 0, 벌과금 없음”로 비과세 통지.

평통사 8일, 미국이 우리 국민 세금을 빼돌려 돈놀이를 하고 탈세까지 한 사실에 면죄부 를 주고, 조사 내용 공개도 거부하는 국세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어.

- 2008년 12월 11일, 평통사,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청원서 접수.

● 2008년 12월 11일, 민주당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의 이전비용 사용에 반대 당론 채택.

2008년 12월 16일,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 안에 대한 반대, 불법 축적된 방위비분담금 1조1,193억원과 이자소득 국고환수 등을 당론 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며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 2008년 12월 17일,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가서명 일주일만 지나서야 언론에 공개.

24일 평통사, 가서명 취소하고 전면 재협상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2009년 1월 15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방위비 분담 8차 특별협정에 정식으로 서명. 평통사, 전면 재협상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 2009년 1월 15일, 방위비 분담 8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

정리 오미정

| 자료 |

방위비분담 청문회 청원서

평통사는 지난해 12월 11일, 홍근수(대표), 문규현, 배종렬, 강정구, 고영대, 김홍수, 문홍주, 변연식, 임종철, 유영재(총 10명)의 이름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2월 국회비준을 앞둔 상태다. - 편집자 주

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통해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군사건설비를 현금에서 현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고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및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2007년 국회의 결의와 이를 재확인한 2008년 10월 2일의 시정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한미당국은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해 '합의'했고, 현금지원을 현물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지만 그것이 방위비분담금 전용의 불법성을 면제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군사건설비를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일 뿐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을 1조원 정도만 부담하고 15조7천억원 가량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 됩니다.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한 것도 국민의 감시의 눈을 피해 미국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가 국회법 제65조 ①항에 의거하여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 미군기지이전사업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 원 내 용

한미당국이 11월 19~20일, 2009년 이후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주둔 경비 지원금(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벌여, 한국 쪽 분담 몫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기로 하고 협정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양국은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고 합니다.

1.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위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LPP협정 개정 시 새로이 포함된 동두천의 캠프 캐슬,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텐리, 캠프 잭슨(강조 필자)의 대체시설자금지원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LPP개정협정 제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정부는 이들 기지를 2002년 LPP협정에 따른 기지이전과 구별하여 미2사단이전 대상 기지로 부름.)

그런데 우리 국가 재정인 방위비분담금이 미2사단 이전에 투입된다면 미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LPP개정협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 국가재정법 위반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예산을 매년 편성한 대로 지출하지 않고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기 위해 따로 빼내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그 연도에 지출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에 있어서의 세입에 의해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¹⁾입니다.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1조1,193억원이 불법 축적되어 왔는데 이는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않을 경비를 예산에 책정하였다는 점에서 제3조 위반입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않을 사업비를 그 해 예산으로 편성해 놓음으로써 우리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 압박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또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는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어긴 불법입니다.

군사건설비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은 또한 제16조에서 정한 예산의 원칙 가운데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2항의 국민부담 최소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은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정부가 스스로 체결한 조약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은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16조 4항의 공개성의 원칙⁷⁾도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적 전용을 국민 몰래 미국에 대해서 양해해 주었고 이 사실을 국회 및 국민에게 밝히지 않고 부인했으며 마치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국회에 결산을 보고해왔기 때문입니다.

3) 헌법 위반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결산을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것, 그리고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를 미2

사단이전 비용으로 쓰기 위해 따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감추고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헌법 제54조 1항)을 유린한 불법입니다.

4)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위반입니다. 200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 당시 한국이 방위비 분담 구성항목으로 LPP지원금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을 때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에 미군기지 이전비용 지원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방위비 분담금이 특별협정에 따라 지원되어 왔지만 미군기지 이전은 그간 별도의 협정에 의해서 그 비용 문제가 처리돼 온 것도 방위비 분담금(군사건설비)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5)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을 어기고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를 지원하는 명분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2사단 이전이나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는 그 목적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아시아태평양 기동군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6) 영리활동의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한미SOFA 제7조 위반

방위비 분담금에서 돈을 빼돌려 축적하고 이를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하는 주한미군의 영리활동은 ‘한미SOFA의 정신에 위배되는 활동의 금지’를 규정한 한미SOFA 제7조(접수국 법령의 존중)8)에 위배됩니다. 육군본부의 행정협정 해설서는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주둔 미군에 대한 특별한 면제와 제외는 공동방위라는 특수한 목적 아래 주어진 것이지만 어떤 특정의 개인이나 군대 또는 국가에게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제42조에 규정된 것 등에 비추어 보건대 주둔미군 자체 및 그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미합중국의 국가 자체의 영리행위가 금지된 것은 물론이다.”9)

7) 요구자 비용부담 원칙 위반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기지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LPP협정과 용산협정의 성립 근거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미SOFA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미군의 운영유지비에 속하고 당연히 미국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며 한국은 다만 시설과 구역의 제공 책임만을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부지제공 이외에 미군의 운영유지비(이전비용)를 LPP협정과 용산협정을 통해서 부담키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이러한 원칙이 한낱 약소국에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LPP협정과 용산협정이 한국민을 기만한 협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의 이전비용 전용이 철회되든가 아니면 LPP협정과 용산협정이 재협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축적과 전용은 국회법과 2007년 및 2008년 국회 의결 사항 위반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가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국회에 정식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원칙적으로 유린한 것입니다.

국회는 7차(2007~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때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천 국방부차관은 지난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때 2007년도에도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국회 의결을 완전히 묵살한 것이자 국회법 84조 2항에서 규정한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10)

정부가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군사건설비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현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국회가 요구한 개선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요구의 핵심은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시정하라는 것이었지, 현금 지원을 현물지원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번 협상에서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합의한 것은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2007년 국회 의결과 “제7차 협정 비준동의시의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2008년 10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3. 한미 정부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합의’했다고 해도 그 불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008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에 대해서 “2000년부터 이미 한미 양국 정부가 양해했던 사항으로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10월 31일, “분담금 사용 용도는 지난 2002년 양국 국방 당국끼리 합의가 있었다”며 “특히 미국은 2004년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에 전용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 관계부처들도 공식적으로 합의해 준 바 있다”¹¹⁾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양해’ 또는 ‘합의’해준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의 불법성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것은 용산협정 및 LPP협정과 별도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안기는 문제이자 LPP개정협정의 핵심 내용을 대체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정부 간 합의라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고, 최소한 LPP개정협정의 위상 및 법적 형식과 동일한 수준인 한미 간 정식 협정 체결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과정에서 2000년부터 한미 양국 정부가 공감했다는 내용이 양국 교섭대표가 서명한 공식문서도 아니고 단순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실토했습니다.¹²⁾

더욱이 정부는 이런 중대한 사실을 2004년 LPP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국회에 정식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 간의 합의는 LPP개정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국회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책임자 문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미 정부 간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도 받지 않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 LPP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을 거친 협정이기 때문에 LPP협정이 상위법으로서 규정력을 갖는 것은 물론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양해와 합의가 먼저고 LPP개정협정은 2004년 12월에 국회 비준동을 거쳤기 때문에 신법우선이라는 원칙에서도 LPP협정이 규정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부가 양해 또는 합의했기 때문에 LPP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적법한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국회 비준동의까지 거친 한미 간 협정에 어긋나는 한미 정부 간 합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 협정을 포함하여 이후 한미 간 협정 체결은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을 현물로 전환한다고 해도 방위비분담금 전용의 불법성이 면제될 수 없습니다.

한미당국은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군사건설비 지급방식을 연차적으로 현물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전용의 불법성을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는 2007년 당시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은 물론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이나가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지급방식 변경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그것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현물로 지원되는 불법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물로 지급방식을 전환한다고 해서 방위비분담금 전용의 불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 변경 문제는 전용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물 전환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이 합의를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면죄부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5.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한미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을 향후 5년간 전전해의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동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매년 협상 때마다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면서 '미군철수' 협박까지 해대면서 증액을 강요하던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2001년의 1,041억원(21.3%)에서 2007년의 2,976억원(41%)로 늘려 이를 고스란히 쌓아왔습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미국은 군사건설비를 매년 수천억 원씩 남겨 이제까지 1조1,193억원이나 축적해 놓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은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한 해 수천억 원씩 남아돌았던 것입니다. 미국은 이 자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남겨 쌓아놓고 있음을 알면서도 정부가 증액을 합의해준 것은 앞으로 축적을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해 미2사단이전비용을 축적할 수 있도록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률의 '사실상 동결'이 아니라,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2사단이전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적인 미국 퍼주기'일 뿐입니다.

6.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지이전협상과 협정 체결과정에서 요구자 부담원칙에 따라 용산미군기지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이 기지이전비용을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정부가 밝힌 사업관리업체(PMC)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미국은 7조5천억원, 한국은 5조8천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7억5천만 달러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2사단이전비용까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등을 통해 부담하게 되어, 결국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CRS 보고서에서도 미군기지이전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¹³⁾

이에 따라 한미양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액을 산정해 보면 전체 기지이전비용은 직간

접비용 모두 합해 16조6,678억원이고, 이중 미국 부담분은 9,750억원(7억5천만 달러*1300원)이고, 나머지 15조6,928억원은 한국이 부담하게 됩니다. 비율로 보면 미국은 5.8%, 한국은 94.2%입니다. 미국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한국이 방위비분담금과 민간투자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사업비로 충당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 중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 여권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은 우선 민간투자금으로 충당되지만 그에 대한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14)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도 한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과 같습니다.

7. 협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것은 변화하는 정세와 관계없이 미국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퇴임 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기간을 좀 더 늘려 장기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양국이 최근 들어 매 2년마다 체결되던 협정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이처럼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이 협정 기간을 늘리려는 것은 체결 때마다 논란이 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을 최소화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신속기동군화)을 제맘대로 구사하고 ‘한미 전략동맹’의 징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미양국이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기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국회와 국민의 감시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신속기동군으로 바뀌고 있고, 한반도 정세의 급변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전례 없이 긴 기간으로 협정을 체결한 것은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미국의 이익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사대주의적 속성을 날것으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8. 우리의 요구

우리는 국회가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굴욕적이고 불법적이며 국회의 권능과 결의를 무시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불법 전용, 협정 기간 5년 합의에 대해 원천 무효 및 전면 재협상을 결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축적되어 미 연방예산에 편입되어 있는 1조1,193억원의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수입 최소 1천억원 이상을 국고로 환수하고, 최소 120억원이 넘는 탈세에 대해서도 국제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환수하고 관련책임자를 고발하는 결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9. 청문회를 통해 확인할 사항

1)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에 대해

- 정부가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당사자
-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 사실을 안 뒤 정부 내 회의 또는 협의의 자세한 내역
-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에 대한 LPP협정 위반 등 적법성 여부 검토 사실 여부
-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2002년부터 군사건설비가 대폭 증액된 이유
- 주한미군이 축적한 자금의 내역(항목별 축적 자금 액수, 연도별 축적 자금 액수)
- 주한미군이 축적한 자금의 운용내역(자금의 유통경로, 연도별 이자수입액, 이자수입의 소재 등)

2) 방위비분담금 축적 및 전용의 불법성 문제

- 방위비분담금 전용은 LPP협정 위반이 아닌지?
-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전용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이 아닌지?
-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닌지?
-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전용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규정한 헌법 제54조 1항 위반이 아닌지?
- 주한미군이 축적한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은 주한미군의 영리활동으로서 ‘한미소파의 정신에 위배되는 활동의 금지’를 규정한 한미SOFA 제7조(접수국 법령의 존중)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 주한미군이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탈세가 아닌지?

3)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국회 보고 문제

-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사실에 대해 최초로 국회에 보고한 날짜와 형식, 내용
-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사실 및 이와 관련된 2000년, 2002년, 2004년의 한미당국 간 합의에 대해 최초 보고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 및 그 법적 근거, 이와 관련한 정부(국방부) 내 협의 또는 회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성격, 회의 참가자, 날짜

4)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해 한미 간 공감과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 10/23, 국방위 종합감사 시, 이상희 국방장관이 ‘2000년 LPP협상 초기부터 SMA의 LPP 사용에 한미 간 공감했다’고 주장한 사실의 자세한 내역(한미 간 공감의 자세한 내용, 공감한 날짜와 회의(공감)의 이름(성격), 협상 참여자, 공감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공감의 형식과 법적 성격, 국회 보고 여부)

- 10/31 코리아타임스 창간 58주년 특별 인터뷰 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분담금 사용 용도는 지난 2002년 양국 국방 당국끼리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의 자세한 내역 (양국 국방 당국 간 합의의 자세한 내용, 합의한 회의의 이름(성격)과 날짜, 합의한 회의 참여자, 합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합의의 형식과 법적 성격, 국회 보고 여부)
- 10/31 코리아타임스 창간 58주년 특별 인터뷰 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은 2004년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에 전용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 관계부처들도 공식적으로 합의해 준 바 있다”고 주장한 사실의 자세한 내역(방위비분담금 전용 합의의 자세한 내용, 전용을 합의한 회의의 이름(성격)과 날짜 및 참여자, 한국 관계부처 간 회의 참여자 및 내용, 합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합의의 법적 성격, 국회 보고 여부)

5)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

- 2009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의 근거
- 주한미군 지원 직간접 경비 내역
- 국방비 대비 방위비분담금 추이
- GDP 대비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금 비교
- 방위비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비 비율 폭증 이유

6) 미군기지이전사업 비용 문제

- 한국 정부 비용부담액
-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기지이전비용 부담액
-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투자금
-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입주시 지불하게 될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닌지?
- 미국 연방정부에서 직접 지출되는 예산
- C4I비용이 폭증하게 된 이유
- C4I 성능개선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 용산협정 위반이 아닌지?

7)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 문제

- 한미 간 논의되거나 합의된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

8)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

-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족동반 3년 근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 아닌지?
- 가족동반 3년 근무로 인한 기지이전 비용 부담 증가 내역
- 가족동반 3년 근무로 인한 기지이전 비용 한미 간 분담 내역
- 가족동반 3년 근무 비용 제공은 용산협정 및 LPP협정 위반이 아닌지?

9)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문제

-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한미SOFA 위반 문제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기지제공 및 방위비분담금 제공의 적법성 문제

● 소개의견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8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여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군사건설비 제공방식을 현금제공에서 현물제공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이전사업의 미국 측 부담비용에 사용하는 것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과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2007년 4월 7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시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또한 2008년 10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차 협정 비준동의시의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체결한 8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양국간 협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체결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협정이다.

이로 인해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불법 부당하게 사용됨은 물론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존엄, 국회의 권위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청원인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청원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이자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이에 청원의 소개의원들은 청원인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이 수용되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과 바람직한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표 1>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LPP협정 개정사항2)

구분	반환기지	반환 연도	대체시설	자금	
지원		현행3)	개정안4)		
		택시 에넥스	'02	'03	불필요
	서울	캠프 킴 '05	'08	대한민국	
		캠프 그레이	'06	'06	미국
		캠프 라과디아	'06	'06	미국

	캠프 에세이온	'10	'08	미국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10	'05	대한민국	
	캠프 카일	'07	'08	미국	
	캠프 시어즈	'11	'06	미국	
	캠프 하우스	'06	'05	미국	
	캠프 스탠턴	'07	'05	미국	
과주	캠프 에드워즈	'07	'05	미국	
	캠프 게리오웬	'08	'05	미국	
	캠프 자이언트	'11	'05	미국	
	캠프 그리브스	'11	'05	미국	
동두천	H220	'08	'08	대한민국	
	캠프 님블	'11	'08	대한민국	
오산	오산공군(베타사우스)		'02.10	'03	불요
	오산공군(알파사이트)		'08	'08	미국
김포	김포 우편시설	'05	'05	미국	
하남	캠프 콜빈	'08	'07	미국	
원주	캠프 이글	'11	'08	미국	
	캠프 롱	'11	08	미국	
인천	캠프 마켓	'08	'08	대한민국	
춘천	캠프 페이지	'11	'05	대한민국	
포항	주한미해군사령부포항파견대			'11	'11
대구	캠프워커(H-805)	'07	'06	대한민국	
부산	캠프 하야리아	'11	'05	목표 불필요	
	부산 DRMO	'05년 6월		'05	대한민국
	캠프 캐슬		'06	미국	
동두천5)	캠프 케이시			미국	
	캠프 호비			미국	
	캠프 레드클라우드				미국
의정부6)	캠프 스텐리			미국	
	캠프 잭슨		'08	미국	

- 1) 신해룡, 『예산정책론』, 세명서관, 2005, 23쪽
- 2)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비준동의안검토보고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수석전문위원, 2004. 11, 14쪽.
- 3) 2002년 LPP협정(필자 주)
- 4) 2004년 LPP개정협정(필자 주)
- 5) 2004년 LPP개정협정에 새로 포함된 동두천의 미2사단 이전대상 기지(필자 주)
- 6) 2004년 LPP개정협정에 새로 포함된 의정부의 미2사단 이전대상 기지(필자 주)
- 7) “예산은 국민과 국회에 공개되지 않으면 안된다…또한 공개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모든 단계에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재정을 감독 통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신해룡, 『예산정책론』, 세명

서관, 2005, 16쪽)

8)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한미소과 7조)

9) 육군본부, 『행정협정해설서』, 1988, 61쪽

10) 제16대 국회 개정국회법은 “결산심사의 형식성을 극복하고 국회결산심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하나로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 국회가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권을 신설하였다.”(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04, 313쪽)

11)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창간 58주년 특별 인터뷰, 2008. 10. 31.

12) 제278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2008. 11. 21., 52쪽.

13) “U.S.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in the process of shifting from sites immediately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at the frontier between that natio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from a large headquarters garrison in the capital of Seoul to expanded facilities further to the south. While the bulk of construction cost will be borne by the Korean government, this initiative could require as much as \$750 million in U.S. construction funding to complete.”

「Military Construction, Veterans Affairs, and Related Agencies: FY2009 Appropri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Updated October 9, 2008, p. 14.

14)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미태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가족주택 임대료를 내겠다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폭로한 바 있음. 노 전의원은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국민관심사가 되고 정치쟁점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합의의사록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문서 교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폭로함.(연합뉴스, 문화일보 2005. 5. 26)

<표 2> 1999년 이후 방위비분담 내역과 항목별 비율

(단위: 억원)

구분	방위비 분담 항목			합 계
	인건비(현금지원)	군사시설(현금지원)	CDIP(현물지원)	
1999(%)	2,120(48)	1,040(23.6)	520(11.8)	731(16.6)
4,411				
2000(%)	2,326(49.6)	1,054(22.5)	527(11.3)	777(16.6)
4,684				
2001(%)	2,507(51.3)	1,041(21.3)	520(10.7)	804(16.7)
4,882				
2002(%)	2,792(45.5)	1,741(28.4)	674(11.0)	925(15.1)
6,132				
2003(%)	3,015(45.1)	1,991(29.8)	737(11.0)	943(14.1)
6,686				

2004(%)	3,241(43.4)	2,352(31.5)	867(11.6)	1,009(13.5)
7,469				
2005(%)	2,874(42.2)	2,494(36.7)	430(6.3)	1,006(14.8)
6,804				
2006(%)	2,829(41.6)	2,646(38.9)	394(5.8)	935(13.7)
6,804				
2007(%)	2,954(40.7)	2,976(41.0)	0	1,325(18.3)
				7,255

주 : 1) 환율은 각 연도 예산편성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기준으로 환산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06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 전망」, 2006, 144 쪽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재구성

* 2007년 통계는 국방부 미국정책과, 「방위비분담 관련 참고자료」, 2008: 외교통상부 및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자료

한미양국의 기지이전비용

항목	한국정부 주장	부담국	실제 부담	예상액	부담액(비율)
	7조 5천억원	미국	9,750억원	9,750억원	(5.8%)
건설비			방위비분담금 + 민간투자 임대주택 건설비		
= 6조 5250억원					
	5조 8천억원		5조 8천억원		
부지매입비	1조 105억원	한국	1조 105억원	15조	6929억원
(94.2%)					
평택지원비	2조 3,573억원		2조 3,573억원		
환경치유비 SOC					

쭉소개의원 명단

연 번	의원명	소속정당	소속위원회	선거구
1	이 정 희	민주노동당	정부위원회	비례대표
2	곽 정 숙	민주노동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비례대표
3	강 기 갑	민주노동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남 사천시
4	홍 희 덕	민주노동당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
5	권 영 길	민주노동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경남 창원을
6	문 학 진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경기 하남시
7	안 규 백	민주당	국방위원회	비례대표
8	이 미 경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서울 은평갑
9	최 규 성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북 김제완주
10	최 문 순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
11	이 종 걸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양 만안
12	천 정 배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산 단원갑

| 지역평통사 모임과 활동 |

서울

12/7 2008년 평화카페 성사

12월 7일, 2008년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갈무리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7.27 평화한마당과는 달리 서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준비하여 '평화카페'라는 이름으로 진행했고요, 기독교 회관에서 160여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2008 평화카페'는 모두 추진위원들이 주인공이고, 추진위원들이 만들어낸 행사였어요. 우선 사회는 추진위원에 가입한 후 평통사 식구가 된 손우정님이 보셨는데요. 손우정님께 제안드린 것은 운영위원들의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것이었어요. 근데 나중에야 실력자인걸 알았지요. 물론 진행은 기대이상이었어요. 능란한 말솜씨로 즉석에서 다섯분이나 회원가입을 하는 결실도 맺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사공연인데요. 모두가 추진위원인 여성분회 '노뎃돌'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래를 울동과 함께 멋지게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옥연 목사님의 통기타와 어우러진 노래솜씨는 어색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바꿔낼 정도로 일품이었어요. 영상도 추진위원의 이야기로 꾸몄어요. 판화가, 의사, 영화배우, 목사, 신부, 책방아저씨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일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참 열심히들 활동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추진위원들의 사례와 소감발표도 있었어요.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 주민대책위원장님, 기독교학생회의 도입방주 간사, 민주공무원노조의 현인덕 부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특히 추진위원 59명, 길잡이 192명을 조직했던 민주공무원노조의 현인덕 부위원장님은 2009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여 전년도 의 10~20배의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결의도 보이셨습니다. 회원이신 황순영 선생님께는 즉석에서 발언을 요청드렸는데요. 밝게 웃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좀더 노력하시겠다는 뜻을 보이셨습니다. 마무리는 추진위원인 강정구 교수님이 해주셨어요. 2009년 정세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40분 강연이었는데도 시간이 짧았다며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17 2009년 7차 정기총회

1월 17일, 서울평통사 제17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평화카페'에 이어 다시한번 평화협정실현운동에 열심히 나서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1시간여의 총회를 마치고 미리 예약해 놓은 근처 식당에서 뒤풀이를 했어요. 자리에 많이들 함께 해 주셨는데요. 중간에 변연식, 서영석 공동 대표님과 신임운영위원장께 선물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있었답니다. 이번 총회 뒤풀이는 흥겨운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내내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 최문희(서울평통사)

부천

12/3 '오바마 시대와 한반도 평화체제' 강연회

2008년 한해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운동을 중점적으로 벌인 해입니다. 12월 3일 오바마가 미국의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오바마 시대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변화될지를 가늠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들과 운동기간에 조직된 추진위원들, 지역의 일꾼들이 모여 09년의 정세를 짚어보고, 08년에 진행된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결과를 간단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12/6 평택투쟁 벌금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2005년~2006년의 평택투쟁 과정에서 벌금이 부과된 사람들이 부천지역에서도 꽤 있었답니다. '투쟁과정에서 벌어진 결과인 만큼 개인의 부담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살려 부천민중연대에서는 2007년, 2008년에 걸쳐 평택투쟁 벌금마련을 위한 일일주점을 두 차례 진행하였답니다.

12/20 송년회

'평택벌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으로 올 송년회를 대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회원들의 적극 권장으로 바쁜 날들이지만, 30명이 넘는 회원들이 모여 서로가 선물도 나누어주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정숙(부천평통사)

인천

인천평통사 7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2009년 1월17일(토) 저녁 6시30분, 부평3동성당에서 인천평통사 7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원,후원회원 등 6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평화협정 실현 1천 추진위원, 1만 길잡이 조직” 힘찬 구호와 함께 김일회 공동대표의 개회 선언으로 7차 정기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인천평통사를 이끌어 가실 공동대표로 김일회, 염성태, 오혜란 회원이 선출되었고, 감사로 윤인중, 박홍순 회원, 운영위원으로 김원식, 박순길, 안용국, 정송호, 조남순, 김종오, 이은직, 한연숙 회원, 사무국장에 유정섭 회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직 운영위원의 2009년 7기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9년 핵심과제로 △‘평화협정 실현 1천 추진위원, 1만 길잡이 조직, 7.27평화협정 집회 200명 참가 △회원후원회원 100명 가입 △월례교육 ‘목요평화사랑방’ △분회 안정화, 열성회원 발굴 및 실천력 향상 △다양한 회원행사 △회비납부율 90% 달성을 전회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특별히 김일회 공동대표가 회원 영상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 마련 특별모금을 제안하였고, 그 자리에서 150여만의 모금액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시상과 특별상 수상이 있었습니다. 특별상은 지난 6월6일 문규현신부님과 함께 한 평화카페에 후원해 주시고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투쟁에 함께 해 주신 ‘성심수녀회’가 받았습니다. 지난해 평화협정 운동을 모범적으로 벌여온 김원식, 이은직, 정동근 회원이 ‘평화협정 모범상’을, 바쁜 일상속에서도 자신의 시간을 나누어 자원활동을 한 신필녀, 문한나 회원이 ‘자원활동상’을, 신입회원 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회원에게 주는 ‘처음처럼상’은 이상준, 김형진, 노경희 회원이 받았습니다

1부 총회가 끝나고 2부 신년회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에서 1천명의 추진위원을 모아내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평화협정 일천주’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새해 소망과 결심을 담은 ‘2009 나의 다짐’ 타임캡슐을 만들었습니다. 이 타임캡슐은 내년 총회 때 개봉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강연(인천평통사)

[알립니다]

회원 영상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마련 특별모금에 함께 해 주세요 ^^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저녁 7시30분 회원 월례교육 ‘목요평화사랑방’이 열립니다. 영상교육 기자재인 ‘빔프로젝트’를 마련하여 회원교육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십시일반 작은 정성을 모아 주세요

* 모금계좌 우리은행 1002-588-004005 (예금주 김일회)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 안덕자님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한연숙 운영위원의 소개로 산행에 참여한 후 평통사를 알게 되어 가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황명곤님이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김형진 회원의 소개로 지난 평화카페에 참여한 후 이번 총회에 오셔서 가입하셨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남부

“반갑다 평화야, 잘가라 주한미군!!” 정세강연회와 송년모임

12월 18일 저녁 평택에서는 경기남부평통사 평화협정체결운동 총화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평택미군기지와 평화협정운동”을 주제로 평통사 본부 유영재정책실장님의 강연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는 근처 식당에서 송년모임을 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강연회 전에 오산분회 모임 보고와 평화협정체결운동에 대한 변혜숙회원의 평화교육 체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변혜숙 선생은 오산푸른학교 교사로 아이들에게 평화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평화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받지 못한 아이들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그린 평화 그림들을 참가하신분들에게 보여주었으며 생활과 삶에서 평화운동의 좋은 사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군포에서도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우홍균 선생이 참가하셨으며 이후에도 분회와 경기남부평통사 모임에 참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택지역 경제위기 조장하는 평택미군기지공사와 경기도, 평택시.

최근 평택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로 해서 쌍용자동차가 청산된다면 평택지역 경제가 파산될것이라고 전국의 언론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평택미군기지이전 지연과 평택시 고덕면의 국제평화신도시 보상 지연으로 촉발된 지역경제위기가 쌍용자동차 경영위기로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군기지확장공사가 벌어지는 팽성읍 안정리 지역과 미군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되는 빌라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들은 거의 경기도청과 평택시청, 미군기지이전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꾼들이 퍼뜨리는 왜곡선전일 뿐입니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을 밀어내고 16조 5천억원(16조5천억원은 한국민의 세금)이나 드는 기지공사, 주한미군전용 군사철도 건설, 주한미군배후전용도시 고덕 신도시와 기지가 연결되는 고속도로 건설등, 한국민보다 주한미군의 이익을 보장하는 첫부른 왜곡선전에 놀아날 국민은 없습니다.

철도니 도로니 기지공사와 성토등은 전부 미군기지를 핵으로 한 부속시설물들이며 평택시민들은 이 도시의 소외된 이방인들입니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영농보장요구를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고, 미군기지공사를 중단하여 농민들이 농사짓고 노동자들이 편안히 일할 수 있는 평택이 되도록 해야만 경제가 퍼질 것입니다.

| 현호현(경기남부평통사)

대전충남

통일 쌀이요~~~

통일의 마음을 전하는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네요.

작년 6월 7일 서천군농민회와 함께 한솔밥 한겨레 통일농장 알림판 제막식 및 통일모내기를 하고 풍년이 되어 수확을 한 통일 쌀이 11월 1일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적인 행보에 어렵게 북녘으로 전달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촉구 대북쌀지원법제화 촉구 6.15통일쌀’입니다.

농민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통일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마음이 모아져 174톤의 통일 쌀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적대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경색되어만 가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어디론가 사라져 찾을 길 없는 상황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자 하는 노동자, 농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은 작지만 소중한 실천이었습니다.

내년에도 통일의 염원을 담아 서천군농민회와 서천지역 평통사 회원들이 통일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7차 정기총회

1월 22일(목) 오후7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7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병규 상임공동대표와 서영완, 원용철 공동대표가 선출되었으며 김지영 회원 등 지난해 열심히 활동했던 회원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더욱 뜻 깊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도정(대전충남평통사)

군산

문규현 신부님과 함께 한 군산 평화카페 !

지난 2008년 12월 5일(금) 오후 6시 30분, 군산청년회의소에서 2008년 군산지역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총화하는 “평화카페”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폭설 속에서도 이번 행사가 무사히 열릴 수 있게 된 것은 참가하신 분들이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과 ‘군산평통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운영위원(군산시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군산평통사 대표 유승기 목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어려운 사회운동 여건 속에서도 군산 평통사를 창립하여 평화협정 실현운동 등 꾸준한 활동을 해온 것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해나가자!”며 인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석분 평통사 회원사업팀장이 <오바마 미대통령 당선과 한반도 평화협정실현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노래공연도 이어졌는데, 이 공연에는 서동완, 박종문, 김판태 운영위원이 참가한 회원남성트리오가 나와 참가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폭설을 뚫고 전주에서 달려오신 문규현 평통사 상임대표는 마지막에 진행된 평화강연에서 “18년 전 임수경과 판문점을 넘으며 외친 것이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는 것이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이 길 누가 대신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열고 나가자”고 강조하시면서 “2009년 평화협정 실현의 길에 여러분도 함께 나서자”고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끝으로 김판태 사무국장이 군산지역 176명 추진위원 중 노동부문이 50%를 차지하는 등 조직결과를 보고하고 추진위원 및 참가자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대책주민협의회, 군산목정평(열린교회, 소망교회, 살림교회, 돌베개교회), 세아베스틸, 참주거실천연대, 군산유기농산물생협,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나눔의집, 군산여성의전화, 돌베개교회, 화물연대전북지부, 군산농민회, 전주평통사준비모임 등 단체들과 개인인사, 회원 등 4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통사 활동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힘을 보태겠다, 부끄럽다 핑계만 대고 열심히 못했는데 오늘을 계기로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평통사가 제작한 “오! 평화” 동영상을 보며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 김판태(군산평통사)

광주전남

새로운 각오로 신년하례 진행

1월 8일 무진교회 앞 ‘우향우’라는 식당에서 광주전남 평통사 신년하례를 진행하였습니다. 년 초 일정 등으로 많은 회원이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상임대표 김병균 목사와 배종열 평통사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광주, 나주, 무안, 해남에서 회원 25명 참여로 진행하였습니다.

김병균 목사는 “지난 한 해 광주전남 평통사가 많이 발전한 것은 회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한 성과였다.”, “이명박 정부가 6.15와 10.4 선언을 부정하고 통일에 역행하고 있다”, “올 해는 광주전남 평통사가 힘찬 투쟁을 전개 통일운동의 일대 전진을 이룩하자”는 힘찬 발언과 문병란 시인의 ‘직녀에게’라는 노래를 열창, 분위기를 뜨겁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서로의 건강과 평통사의 발전을 위하여 덕담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심한 감기가 있음에도 안성례 어머니님과 최병상 운영위원님이 참여해 주셨고, 이선휴 선생님과 김용성 목사 추천으로 박종태선생이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평통사 간부, 임원 워크숍 참가

1월 12일 대전에서 진행된 평통사 간부, 임원 워크숍에 참가하였습니다. 상임대표 김병균 목사, 서창호 공동대표, 광주에서 윤종순 선생, 배민혁 회원, 나주에서 박종주 운영위원, 곡성에서 박종채 회원, 무안에서 최병상 운영위원, 해남에서 박종찬 목사 등 9명이 참석했습니다. 곳은 날씨로 인하여 몇몇 분들이 참석 못했지만, 전체 평통사의 주요 활동가들을 만난다는 들뜬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09년 정세와 평통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그리고 식사의 순으로 진행하고 급히 내려와 어렵게 모인 회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날 나주에 박종주 운영위원은 “전체적으로 좋았고, 강정구 교수의 말씀이 참 좋았다”, 곡성에서 참석하신 박종채 회원께서는 “평통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평통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정동석(광주전남평통사)

[알립니다]

쫚09년 1월 각종 모임이 열렸습니다.

21일 곡성 농업기술센터에서 곡성군 농민회 주최로 김종일 처장님 강연회 열렸습니다. 23일 해남, 29일 나주지역 회원 모임이 열렸습니다.

쫚회원, 후원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윤복순, 이광교, 최영수, 이정확, 홍범석, 윤영상, 윤정원, 오해균, 이재광, 정승창, 김성룡, 양수남, 서한용, 조성규, 박종태, 장진희, 이선휴

쫚2월 12일(목) 저녁 7시 광주 무진교회 교회당 4차 정기총회 가 열립니다.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식사가 준비됩니다.

안동

고 이상윤회원 1주년 추모식 열어

평통사 회원이자 우리 지역 대표적 일꾼이었던 고 이상윤 회원의 1주년 추모식이 그의 기일(忌日)인 지난 11월 29일(토), 유가족을 모시고 장지가 있는 안동시 안기동 천주교 공원묘역에서 여러 민주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엄숙히 치러졌습니다. 고인께서 생전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던 지역의 여러 단체는 물론 지난 대선정국 당시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창조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많은 지인들이 전남 광주와 서울이라는 먼 거리를 마다 않고 함께하여 고인의 빈자리를 더욱 아쉽게 한 추모식이였습니다. 강석주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모식은 매우 쌀쌀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미망인 김정희님의 붉은 눈시울은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추모사에서 생전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미처 몰랐다면 앞으로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지역 사회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소회를 밝혀 주위 사람들을 몽클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6차 정기총회 개최

2008년 12월 23일(화) 오후 7시 나섬학교에서 안동평통사 제 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총회 제 1부 행사에서는 안동평통사의 회칙 개정과 지난 한 해의 사업평가 및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새로운 사무국 편성을 위한 새 임원 선출과 인준이 이어졌습니다. 총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를 대표하는 회장의 명칭 대신 대표체제로 전환하고 대표로는 박용제선생이 추대되는 한편 새로운 사무국을 이끌 사무국장과 정책실장으로는 박무식, 한철희 회원이 선출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중앙평통사에서 배종렬 상임대표를 비롯 유한경, 박석분 회원팀이 참석하여 총회를 축하하고 격려했으며 또 내년도 전개될 정세전망과 또 이에 바탕 한 평통사 회원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나름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진 총회 2부에서는 평통사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은 많은 지역인사와 단체들을 초빙하여 다과를 함께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날 안동평통사 제 6차 총회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과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철희(안동평통사)

[알립니다]

쭝2009년 2월 7일(토), 군산평통사 정기총회(오후 4시, 참주거실천연대)가 개최됩니다.

김제부안 준비모임

기축년 새해가 시작 된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흰 눈이 쏟아지는 겨울날 그래도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도 봄은 올 것이고 그 봄은 통일이 가져다주리라 믿습니다. 민족의 봄을 재촉할 통일을 향한 평통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지나간 한해 김제·부안평통사예비모임의 발자취를 떠올려 봅니다. 지난해 5월 7일 배종렬 대표와 김용성 목사가 부안을 방문해 엄영애 선생이 추진위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그해 7월 27일에 열린 “한반도 평화협정실현 한마당”에 엄영애선생께서 직접 참여하신 것이 시발점이 되어 김제·부안평통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16일에는 김제·부안평통사 준비를 위한 간담회가 부안 돈지에 있는 엄영애 선생 자택에서 열려 여기에 김관태, 박찬희, 엄영애, 허영철씨가 모여 평통사에 대한 소개와 예비모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차 평통사 정기모임을 김제에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손은하 목사와 이용만 선생 댁에서 갖고 평통사 역사와 평통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활동에 대해서 소개받았습니다. 1차 모임 후 11월 14일에는 정읍 태인에 계시는 이수금(전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선생을 방문하여 평통사를 소개 추진위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1월 모임은 부안 돈지 엄영애 선생 댁에서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각자 가지고 있던 통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통일이 민족의 숙원이며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이 후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군산 평화카페에서 광주전남평통사의 배종렬대표님과 김용성목사님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허나 눈이 많이 온 와중에도 행사를 잘 마무리했다는 보고를 듣고 군산평통사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1월 28일 김제·부안평통사 모임에서는 통일운동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와 6.15선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주제를 가지고 학습하기로 정했습니다. 김제·부안지역의 예비모임이 아직 미력하지만 한 지역을 능히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각지역 평통사의 노력을 기대하며 함께 뛰는 기축년 한해가 됩시다.

| 황승원(김제부안 준비모임)

전주 준비모임

전주준비모임,

새해 들쨍날 황방산에서 마음을 모으다!!

취해(무자년)가 가고 소해(기축년)가 열린 들쨍날, 회원 활동으로 '산 걷기' 를 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8일에 올랐던 이석영 교수님 댁 뒷산과는 달리 이번에는 '산 오르기'가 아니고 '산에서 한가롭고 느긋하게 걷기'였습니다.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라 해도 그러려니 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주 북서쪽을 감싸고 있는데요, '황방산'이라고 부르죠. 그 곁을 수도 없이 지나쳤지만 그곳을 밟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본래 이곳으로 낙점을 한 데는 이석영 교수님을 생각한 게 컸는데, 정작 이교수님은 이날 서울에서 무주 푸른꿈고등학교 이사회가 열려서 함께 하지 못하셨지요. 김수돈, 노백송, 문이범, 권동룡, 이승희, 이재호, 김판태 회원이 함께 했고 김형근님은 인사만 나누고 떠나셨습니다.

권동룡 목사님의 두 아드님 하람이와 헤람이가 동행 했는데 아이들의 친진함 속에서 친국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점심은 새알팔죽과 바지락 칼국수로 뿌듯하게 나누었습니다. 새해 기분도 낼 수가 있어 좋았는데, 권목사님께서 기분 좋게 내주셔서 더욱 좋았습니다.

유일 여성 회원 이승희님께서 명쾌하면서 부드러운(?) 사회로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안전에 대해서 원만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창립총회는 형편상 2009년 2월 21일로 변경하고 다음 회원 전체 모임은 2월 2일(월)에 갖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모임의 진로와 관련되는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회원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 길을 가기로 뜻을 모은 게 이날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게 가장 큰 일이 아닐까 합니다. 우선 2월 21일로 내걸린 전주평통사 창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재호(전주 준비모임)

| 사진이야기 |

- 2008.12.8,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돈놀이 탈세 눈감아주는 국세청을 규탄!
- 2008.12.9, 111차 반미연대집회.
- 2008.12.11, 방위비 청문회 청원서, 국회에 제출하다.(사진 : 통일뉴스 조성봉)
- 2008.12.16,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추진위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 2008.12.18, 3조원에 가까운 저장관리비도 못받아내고 쓰레기 탄약만 떠맡은 전쟁예비물자
(WRSA-K) 양도협약 규탄
- 2008.12.23, 얼마전 시집 <절정의 노래>를 낸 민족시인 이기형 선생이 홍근수 상임대표께
책을 선물.
- 2008.12.24,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가서명하는 외교통상부 규탄
2008.12.29, MB악법 저지 여의도 촛불기도회 참가
- 2008.12.31, 언론관계법 저지 여의도 언론노조집회참가
- 2008.12.6,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 파주시 선전전
- 2009.1.4, MB악법 저지 여의도 촛불 문화제 참가
- 2009.1.5, 2009년 평통사 사무처 시무식
- 2009.1.8, WMD 대확산 실무기구 해체 촉구 기자회견
- 2009.1.10, 이스라엘 가자침략 규탄 집회 참가 '학살을 멈춰라'
- 2009.1.12, 평통사 2009년 임원워크숍
- 2009.1.13, 112차 반미연대집회.

회비와 후원금(11·12월)

중앙

[대표/임원] 배종열 문규현 홍근수 강정구 변연식 문홍주 김홍수 임종철 장경옥 이일영 박용일 홍창의 김성운 박석률

[특별회비] 서창호 서울평통사여성분회(2개월) 장관철 장창원 전영남 홍근수

[후원금] 강남교회 김준기 김숙희 김형예 모빌리언스 홍정화 이상춘(향린희년남신도회) 민변사진전상금 향린교회(향린청여신도회) 향린교회(청년여신도회) 박춘원 서경숙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유영섭 이은혜 이광수 이기형 이성호 임동명 최문숙 최재영 푸른마을교회 하정일 한희숙 해피빈 향린교회 홍민애

서울 평통사

[11월 회원회비] 강유겸 고이지선 공동길 권병근 권병근 김경자 김동훈 김명일 김상진(2개월) 김석민 김석제 김순정 김슬기(2개월) 김연옥 김영리 김영진 김영호 김은미 김종일 김종일 김중한 김지수 김진환 김채석 김치섭(2개월) 김향연 김현성 김현애 김화수 김후중 나영훈 노덧돌(여성분회) 문석우 박석분 박선자 박정훈 박종권 박준희 백차현 서동빈 서영석 서창석 선소진 선순단 손우정 송민영 신재희 오미정 우미정 유영재 이경아 이경목 이경식 이경옥 이민형 이병일 이수정 이형수 이수지 이승규 이승민 이윤영 이종남 이종민 이행복 이현규(2개월) 이현숙 이해영 이해진,박승렬 이호민 인민지,김종완(2개월) 임동원 임보라 임장혁 임희호 장성식 장속도 장희수 전영규 정귀남 정기열(2개월)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준영 조영희 조요환 조창현 주재영 차정은 최낙현 최문희 최소영 추정수 탁재범 한문덕 한호석 허정섭 허학범 황규금 황선 황윤미

[11월 후원회비] 강애란 강양원 강영옥 고경심 고은숙 권영무 김각영 김기환(2개월) 김미영 김민이 김보경 김상중 김선희 김성원 김세옥 김승현 김영진 김영호 김용순 김유중 김재운 김점희 김정순 김정자 김진미 김혜숙 김화순 김희국 김희영 나현대 나혜영 남인순 노은아 문경희 박경혜 박사라 박승환 박은봉 박후임 서보혁 서상미 서정호 서황석 손은정 송혜진 순상환 안지성 양계탁 양창호 여혜숙 오행진 오혜경 유영철 윤영수(2개월) 이강택 이경희 이광숙 이남현 이덕희 이병용 이상근 이소영 이순혁 이승무 이애용 이연자 이영옥 이윤이은영(2개월) 이인희 이재정 이정용 이정태 이창호 이춘미 이해삼 이현준 이해경 이해순 임영인 정순영 정은선 정철호 정철호 조명환 최용기 하보애 한기황 한상근 한상옥 한재현 허헌중 홍길표 홍승완 홍혜자 황호정

[12월 회원회비] 강유겸 고경심 고이지선(2개월) 공동길 권병근 권처흥 권혁문(2개월) 김경자 김동훈 김명일 김상진 김석민 김석제 김성운 김순정 김슬기 김연옥 김영리 김영진 김은미 김재원 김종일 김종일 김중한 김지수 김진환 김채석 김한성 김향연 김현성 김현애 김화수 김후중 나영훈 노덧돌(여성분회) 문석우(2개월) 박석분 박선자 박우석(2009년 회비) 박정훈 박종권 박종기 박준희 박희성 백차현 서동빈 서영석 서창석 선소진 선순단 손우정 송민영 신재희 오미정 우미정 원응호(14개월) 위선남(2개월) 유영재 유호명 윤영일(5개월) 윤호상 이경목 이경식 이경아 이민형(2개월) 이병일 이수정 이형수 이수지 이승규 이승민 이윤영 이종남 이행복 이현규 이현숙 이해영 이해진,박승렬 이호민 인민지,김종완(2개월)

임동원 임보라 임장혁 장성식 장속도 장윤지(2개월) 장희수 전영규 정귀남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준영 조영희 조창현 주재영 최낙현 최문희 최소영 최영숙 추정수 한문덕 한호석
허정섭 현동식(2개월) 황규금 황선 황윤미

[12월 후원회비] 강애란 강양원 강영옥 고예정 곽상진 권영무 김각영 김균열 김기환 김문
영(2개월) 김미영 김민이 김보경 김상중(2개월) 김선희 김성원 김세옥 김승현 김영진 김용
순 김유중 김재운 김점희 김정순 김정자 김진미 김충례 김혜숙 김화순 김희국 김희영 나현
대 나혜영 남인순 노은아 문경희 박경혜 박사라 박승환 박은봉 박후임 서보혁 서정호 서황
석 손은정 송금심 송혜진 순상환 신만호 안지성(2개월) 양계탁 양창호 여혜숙 오정수 오행
진 오혜경 유영철 윤영수 윤영수 이강택 이경희 이광숙 이남현 이덕희 이병용 이상근 이상
희(2개월) 이소영 이순혁 이승무 이해용 이연자 이영옥 이윤 이은영 이인희 이재정 이정용
이정태 이창호 이춘미 이해삼 이현준 이해경 이해순 임영인 정순영 정은선 조명환 최용기
하보애 한기황 한상근 한상옥 한선영(2개월) 한재현 한중현(2개월) 허헌중 홍길표 홍승완
홍혜자 황호정

부천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신광 강용애 강혜선 곽노충 권혜숙 구현모 김덕근 김민옥 김성
용 김성훈 김성희 김숙희1 김숙희2 김인영 김정호 김정훈 김주영 김지숙 김진숙 김현숙 김
효철 노은하 노철성 문은정 박병준 박병훈 박석진 박인호 박옥선 박용섭 박은영 방정미 배
영미 백창석 서경숙 서혜숙 석의정 성명수 성명은 소우영 신장호 신정길 이경숙 이리나 이
보영 이상수 이상원 이숙주 이숙진 이영아 이영재 이옥화 이종주 이준훈 이진혁 이현주 임
숙영 임현순 유길준 유승우 유정엽 윤영근 윤재명 장동환 장미숙 장인옥 장혜영 전윤미 정
승현 정용진 정창욱 조미옥 조민우 조지선 주명숙 주정숙 주호현 지은희 지태봉 차복례 최
경순 최경호 최은주 최정규 최혜정 한태희 허호인 현지환 홍갑표 홍제숙 홍진표 홍혜숙 황
영신 황영희

인천평통사

[회원회비] 고상주 고영남 곽준경 구완모 권창식 권태형 김강연 김경민 김경태 김경희
김대영 김민서 김백수 김보희 김선미 김영덕 김의숙 김일희 김종오 김종현 김주숙 김중찬
김창수 김호영 김희겸 두현진 류성훈 문한나 박광선 박순길 박승문 박유순 박인호 박종익
박창훈 배문종 백요순 서경석 서경혜 서동완 서성덕 서영선 서재경 서재훈 서화조 손선재
송영주 송재철 신나영 신동훈 신창선 신필녀 신현범 심자섭 안소희 안용국 여영석 염성태
오수정 오현곤 오혜란 유정섭 유한경 유한수 윤선영 윤인중 윤화심 윤희숙 이남희 이무용
이상준 이영라 이용수 이은순 이은직 이재윤 이종훈 이준걸 이진권 이진실 이천직 이춘식
인수범 임재훈 장근수 장금배 전혁구 정송호 정유성 정재훈 정현숙 정형서 조남순 조성혜
조승철 조승현 조인휘 진재환 차광호 최성목 최장수 최종락 최현호 한연숙 한영순 홍 종

[후원회비] 고성임 김금옥 김대인 김도식 김동운 김명숙 김명종 김미영 김상기 김정대
김지영 김지은 김태정 김현주 김희숙 노경희 문병호 박상태 박상호 박순덕 박순희 백은정
송경평 송정로 송한석 신용준 신정순 심이섭 심재건 안용원 오석근 오종춘 오창근 오혜영

유미자 유재원 유정희 유한성 유한진 이거중 이덕규 이미경 이미영 이승미 이승천 이옥희
이은희 이전범 이형진 이해정 이화전 임경희 임병구 임용렬 정동근 정명탁 정백영 정연실
정유선 정윤엽 조병규 조영정 조태영 천재용 최명희 최민우 최 용 최원식 최진숙 하태준
허문예 허필자 홍학기 황선하

경기남부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상욱 권혁범 김기덕 김택균 문종식 민영완 변혜숙 손영인 오영
미 이근량 이수용 이승윤 이양진 이우곤 이은우 이재영 이종필 이진희 장태곤 장창원 최돈
표 황재순(2개월)

대전충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훈 강선호 강호길 고양우 고준택 권선필 권인 김기수 김미경
김미옥 김병곤 김성자 김영석 김재봉 김제선 김종필 김지수 김지영 김홍업 김홍수 류기형
류재중 문양로 문영국 박경란 박노찬 박도신 박범창 박영칠 박희인 서기순 서기자 서영완
서영희 소중영 손용갑 손정희 송관욱 송신근 송원준 송인준 송태현 신성정 신현정 심봉구
심유리 양성호 엄기문 엄자옥 오광영 오명세 오은아 원용철 원용호 유성호 유영민 유요열
유윤우 유장환 유종철 윤병민 윤상렬 윤해경 이경아 이기홍 이미옥 이번영 이요한 이은아
이종명 이지연 이진규 이창복 이춘자 이화자 임수규 임인수 임재현 장도정 장인백 전기룡
전은경 정성삼 정순희 정태순 정하진 정한섭 조부활 조성균 조성미 조주형 최영민 최정임
추교화 하일청 허민정

전북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최인자 정은주 박영천 이병기 이명자 장수나 이진규 박은경 이병
주 안경숙 정창완 장완수 김명근 김순희 허정길 전호일 전호정 김아영 라귀인 최희숙 김미
경 정용용 신용우 최성용 김동학 양지연 최수경 이경진 황인철 김미경 오인빈 이규태 채운
석 정운승 신범석 최민옥 조성숙 이장우 이병식 황영하 서현선 박용호 박충례 이정현 방용
승 이성교 전용균

[운영회비] 양재석 전병생 김대송 이창근 현주억 오기주 이세우 박영천

군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경수 김도걸 김미주 김 삼 김성훈 김인수 김준근 김진호 김진
환 김판태 김효성 남현욱 노승민 문규옥 문성주 문영용 박미라 박영희 박종대 박종문 서경
희 서동완 선진숙 송상구 신수철 엄미숙 여성구 우훈식 유승기 유재임 유하영 이상호 이성
원 임보영 임춘희 전재현 전해숙 정건희 정 민 정병휴 조규춘 조성옥 조판철 최대준 최영

목 최재석 홍경갑 황현정

광주전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흥문 김경태 김관주 김광훈 김기수 김대성 김덕현 김도균
김명훈 김미경 김병기 김병모 김병태 김성룡 김수미 김승환 김영식 김옥길 김완진 김용성
김은곤 김은숙 김인숙 김재현 김진근 김태옥 김 현 김희용 나운임 남부원 노준복 리 익
마대중 모영현 문유신 박광순 박규상 박병율 박상재 박석면 박석환 박선이 박승옥 박영배
박오열 박윤수 박종주 박종찬 박종채 박창균 배무궁 배영일 배정섭 백은경 서창호 서현화
송경희 송봉섭 심창남 안성례 안희만 오근선 오승주 오해균 오형옥 유진이 윤복순 윤정원
윤종순 이광교 이광철 이기호 이대준 이돈기 손용석 김순종 이보영 이영선 이영실 이용대
이윤옥 이인수 이재광 이재창 이철우 이태석 이현수 이희수 임현삼 장관철 장우광 전경일
전영남 정기대 정길주 정동석 정록호 정유철 정종득 정중석 정찬록 정희억 주근호 채일손
최병상 최영수 최종률 최진연 최창현 한강희 홍용식 무등교회 무진교회 큰사랑교회 민들레
교회

안동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민석 강석주 권기찬 권정애 권주원 김금희 김영애 김옥희 김인
숙 김정석 김정희 김주철 김지섭 김창환 김관갑 김현택 김현숙 박무식 박용제 박종규 박화
무 배오직 배용한 오덕훈 우성섭 유춘우 윤지홍 이규중 이천우 이형창 장호철 정복순 정철
환 조선아 최난희 최윤희 최형석(2개월) 피재현 한철희

전주평통사 준비모임 (CMS회원만)

고경수 김남경 박성민 박순종 배찬호 이영훈 전창훈 허정호

대구평통사 준비모임 (CMS회원만)

고경수 박성민 박순종 배찬호(2개월) 이영훈 전창훈 허정호

부산평통사 준비모임

김건우 이화진(12월)

경기북부 지역회원

김일권 주병준

평화통일연구소

[11월 이사회비] 강정구 김경호 김종수 김태준 노재열 배종렬 신정길 임승계 조현정 홍
근수 홍영진

[11월 후원회비] 강진희 고효완 김기오 김미령 김창범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이범준 이
선엽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12월 이사회비] 강정구 김경호 김낙중 김종수 김태준 노재열 배종렬 신정길 임승계 조
현정 홍근수 홍영진

[12월 후원회비] 강진희 김기오 김미령 김창범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이범준 이선엽 이
왕재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 관련 문의는 지역 평통사 사무국이나 중앙 총무국에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 평통사 회비
납부 계좌는 맨 뒷면을 참고하세요.

편집후기

2009년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략과 학살만행으로 뒤숭숭했고, 불도저식 MB악법 강행으로 기가 찼으며, 용산 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린, 그런 연말 연시가 지나고 설 연휴마저 지나니, 2009년 1월도 훌쩍입니다.

새해를 맞아 준비해야 할 것들을 마저 채비하지 못한 상태로 허겁지겁 1월호를 냅니다. 지역 평통사 총회들이 진행되고 있고, 2월 14일에는 15차 운영위원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대한 평가와 올해 계획들이 논의되는 자리에서 <평화누리통일누리>의 존재이유와 가치를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평통사 사정을 잘 아는 회원 몇 분이 “그게 다 돈인데... 우리집에는 안 보내셔도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게요” 합니다. “받아서 읽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거나 “다 읽은 회지를 주변 분들께 읽어보라고 권유하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지요” 대답은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평화누리통일누리>가 이 살인적인 경제위기속에서도 제 값어치를 하고 있는걸까 하는 것이지요. 부족한 역량을 핑계삼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1,500여 회원, 후원회원, 독자분들께 <평화누리통일누리>가 다가설수 있도록 더욱 분발 하겠습니다.

2년여를 끌어왔던 방위비분담 8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끝나고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7차 협정 직후 부터 평통사의 대응 투쟁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국회 청문회 청원서를 자료로 실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핵심은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이 진행중임에도 대북 봉쇄와 선제공격 준비를 계속 중인 한미 군사당국을 규탄하는 글, ‘WMD 대확산 실무기구’를 실었습니다.

다시한번, 신자유주의 막개발의 사냥터에서 먹잇감이 되어 세상 꼬트머리로 내몰려 죽어간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